

“산업부-도 협력해 탄소산업 초격차 이끌어내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특화단지 생산현장 시찰 최부지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신시장 창출 협조 요청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탄소 소재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부 고위 공직자의 현장 시찰에서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후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탄소 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생산 현장 점검은 도내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효성과 테크카본에서 이뤄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특화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65만㎡와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57만㎡ 규모를 포함하며 효성첨단소재를 앵커기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159억원을 투입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개인용 비행체, 풍력 블레이드 등 국산 탄소 섬유 4대 주요산업에 대한 맞춤형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탄소 중간재·부품 성형 장비 19종을 연내 구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까지 237억원을 투입해

경량 자동차 부품성형기술 개발, 수소 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등 소부장 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수소·공급기업 간 협력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애로 기술소초 중심 맞춤형 제작자 교육과 앵커-협력기업 간 가치사슬 연계 산학연 협력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정부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우수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산업 기술 리더십 제고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탄소 소재산업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자치도는 탄소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탄소소재 혁신기관과 170여개 탄소기업이 집적화된 탄소산업의 메카”라며, “국산 탄소 소재 공급망 강화 및 탄소산업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선도형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최 부지사는 탄소 소재 초격차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탄소 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점진하고, 탄소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4일 오후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탄소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도,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모집

6월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복'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고자 도민인권지킴이단 단원을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을 오는 6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제1기가 출범했고, 2021년 7월부터 활동 중인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올해 6월 말 활동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4기가 새롭게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은 총 1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6월 13일까지며,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 6개월이다. 위촉된 도민인권지킴이들은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도는 시·군·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여하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인권단체 관계자, 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및 사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등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민원소통→인권공감→인권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amrnhw@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보호팀 (063-280-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은 인권담당관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을 가진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모집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되면 인권지킴이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도내 현장에서 인권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사회복지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내달 말까지... 여름철 자연재해·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6월 말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태풍·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전체 9,718개소(2023년말 기준)의 운영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 점검 및 시·군 점검반을 통한 확인 점검과 도·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사회복지시설은 5월 말까지 소관 시설 안전관리 체계, 소방안전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상태, 풍수해 대비 상태 등을 자체 점검하고, 시·군은 6월 말까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만호 기자

도는 노후시설 등 안전취약 시설을 선정해 안전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감염병 관리 대책 등 여름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현재 애로사항 등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적 제고 및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운영상황 및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대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 ‘마지막 스퍼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2단계)’ 사업 종료(2024년 말)를 앞두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SW)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참여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2015년부터 전북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1.0(1단계, 2015년~2019년) 사업을, 2020년부터 2.0(2단계, 2020년

전북자치도, 사업 완성도 제고·성과 확산 총력

~2024년) 사업을 수행해 왔다. 1단계 사업을 통해 농생명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 지원하고, 이를 통한 창업 지원 등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진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37억 원이 투입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북의 농생명 특화 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다.

2단계 사업은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인력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

진해 왔다. 농생명 산업에 디지털 산업을 접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일은 농도 전북의 커다란 숙제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0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직·간접) 589명, 전문인력양성 207명, 신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발굴 71건, 사업화 매출액 37억 원, 해외 글로벌 매출액 25만 8,000달러, 규제 샌드박스 발굴 6건 등의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기업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도는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유)동방이노베이션, 에이엔피 2개사를 선정했으며, 기업당 연간 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에 (주)센스게임즈, (주)다운정보기술, 서포트, (주)모션, (주)바이오라인 등 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연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과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분야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성공적인 유아 교육·보육체계 위해 머리 맞대

도, 민·관·학 합동 특별강연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체계의 유보통합을 위해 도내 여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나눠져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 정책으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사)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는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통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민, 관, 학 합동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표준화된 공간·시설 기준 개선안 통합모델 마련 적용 등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날 특별강연회에는 송대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자문위원이 ‘유보통합의 진행 상황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2시간 추진된 유보통합 진행 과정과 영유아 보육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 사항과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자치도와 (사)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는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통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민, 관, 학 합동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분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바람직한 보육환경 개선에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지금껏 질적인 성장을 하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보육현장 관계자의 진심을 모아 어린이집의 강점을 발휘하고 보육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유보통합에 한마음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보다 나은 유아교육 체계 확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도 “유보통합에 대한 부모님들과 보육계 종사자분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박정규 의원,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화재 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도지사는 화재안전 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소화패시, 미끄럼 안전매트 등)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규 의원은 “화재출동 7분 이내 도착률이 면 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 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추경 심사

“도내 학교급식 재료 물래 중고 장터 판매 관련 확대 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지난 1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감사과에서 계약 관련 하자보증기간 이행을 적극 활용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컨설팅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적정 추계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도내 학교급식 재료를 물래 중고 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확대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사진행 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 등 현황에 대한 자료와 관련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은 당초 공사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점을 우려하며, 의회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 전라고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학교 통폐합 재정지원금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학부모설명회 등 다수의견 청취를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효과성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전 공사로 인해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도 교육청 순 세계 일여금 약 3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후,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편성된 것과 관련, 본예산 편성 시, 세심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 교육청 시설비와 관련, 전반적으로 예산이 광범위하게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